

2024년 9월 22일 시행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박문각 ‘합격예측’ 전국모의고사(11회)]

응시번호	
성명	

문제책형
가

【응시직렬 및 시험과목】

응시직렬(직렬코드)	제1·2·3·4 시험과목(과목코드)				
행정직 (02)	헌법 (04)	행정법 (07)	행정학(08)	경제학 (09)	
세무직 (06)	헌법 (04)	세법 (15)	회계학(13)	경제학 (09)	
교정직 (08)	헌법 (04)	행정법 (07)	교정학(18)	형사소송법(19)	
검찰직 (13)	헌법 (04)	행정법 (07)	형법 (25)	형사소송법(19)	

※ 반드시 본인의 응시 직렬 코드를 답안지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문제책에 기재된 과목 순서와 동일하게 답안지에 제1·2·3·4과목 답안을 순서에 맞춰 과목코드와 함께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성적확인 및 이의제기 안내

1. 성적공개 일시

- 성적공개 : 2024. 09. 26.(목)14:00
- 온라인 성적확인 : OMR 답안지에 이름,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성적 조화가 불가하니 반드시 마킹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의제기 기간

- 2024. 09. 22.(일)12:00 ~ 2024. 09. 23.(월)18:00

3. 이의제기 방법

- 박문각 공무원 온라인 ▶ 모의고사 ▶ 나의 모의고사 ▶ 1:1문의 / 이의신청 게시판

4. 전과목 무료 해설강의

- 2024. 9. 23.(월) 15시 오픈
- 박문각 공무원 온라인 ▶ 무료특강 ▶ 해설강의

※ 문제책은 시험 종료 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박문각 전국모의고사

목 차

【헌 법】	-----	1
【행 정 법】	-----	7
【행 정 학】	-----	13
【세 법】	-----	16
【회 계 학】	-----	21
【경 제 학】	-----	25
【교 정 학】	-----	28
【형사소송법】	-----	32
【형 법】	-----	38

헌 법 (04)

문 1. 헌법 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정의 법률이 반드시 헌법전에서 규율하여야 할 기본적인 헌법사항을 헌법을 대신하여 규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상위의 헌법규범에 배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성헌법의 체계에 위반하여 헌법위반에 해당한다.
- ②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 ③ 한미무역협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른 헌법개정절차에서의 국민투표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④ 우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 제정 규정이고 무엇이 헌법 개정 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문 2. 소비자보호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 ②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벌이는 소비자불매운동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취지에 반한다.
- ③ 소비자보호운동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소비자는 단순한 상품이나 정보의 구매자로서가 아니라 상품의 구매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 또는 공급자로부터의 부당한 지배와 횡포를 배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수호하는 소비주체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 ④ 소비자불매운동이 예정하고 있는 ‘불매행위’에는, 단순히 불매운동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에게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행위, 불매운동 실행을 위한 조직행위, 직접적으로 불매를 실행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괄될 수 있다.

문 3.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모든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 ② 국가배상청구권은 모든 외국인에게 인정된다.
- ③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 인정된다.
- ④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외국인에게 인정된다.

문 4.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 진보적 야당이 등록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제3차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 ② 정당대표나 주요 관계자의 행위라 하더라도 개인적 차원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정당해산심판의 심판대상이 되는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③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결국 그 정당이 표방하는 정치적 이념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 ④ 헌법 제8조 제4항의 명문규정상 요건이 구비된 경우라면 정당해산결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정당해산결정으로 인해 초래되는 정당의 정당활동 자유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과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는 사회적 불이익을 고려할 필요 없이 정당해산결정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문 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민영방송사업자로서, ‘○○’라는 프로그램에서 담배 제조·판매업체인 한국담배인삼공사를 협찬주로 고지한 내용을 총 46회 방송하였다. 이에 방송위원회는 위 협찬고지가 방송법 제74조에 위반되었음을 사유로 甲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甲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방송법 제74조 등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 ① 방송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단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의견 및 정보를 표현, 전파하는 주관적인 자유권 영역 외에 그 자체만으로 실현될 수 없고 그 실현과 행사를 위해 실체적, 조직적, 절차적 형성 및 구체화를 필요로 하는 객관적 규범 질서의 영역이 존재한다.
- ② 방송사업자의 주관적 권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형성에 의하여 비로소, 그리고 오로지 형성된 기준에 따라서만 성립될 수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제재가 수반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성격을 기본권 제한규정으로 볼 것이다.
- ③ 형성법률에 대한 위헌성 판단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 규정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 내지 비례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성법률이 그 재량의 한계인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지키면서 방송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 ④ 방송사업자인 甲의 협찬고지에 관한 방송운영의 자유 등 주관적 권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형성을 통해서 비로소, 그리고 오로지 형성된 기준에 따라 성립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이나 침해를 내포하지 않고, 따라서 또 다른 헌법적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문 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식회사 A는 시사종합주간신문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A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甲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 등을 보도하면서 불공정한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사과문 게재를 결정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는 A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하였다. A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재심기각통지를 받았다. A의 대표이사 겸 발행인인 乙은 재심기각통지를 받았으므로 지체 없이 사과문을 게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던 중, 직권으로 공직선거법 조항 중 ‘사과문 게재’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그 사과문이 마치 언론사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작성된 것처럼 해당 언론사의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표명되도록 하며, 그 결과 독자들로 하여금 해당 언론사가 선거와 관련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버린 보도를 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듦으로써, 언론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언론사의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를 저하시키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한다.
- ② 법인의 신용이나 명예에 관한 권리가 법률에 의해 보호됨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헌법이 인정하는 법인의 기본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과문 게재 조항은 언론사인 법인으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는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므로, 법인의 소극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다.
- ③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언론사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인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함에 있어 공적인 책임의식을 높이고 선거에 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된다.
- ④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한 공익 실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입법자로서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덜 제한하는 수단을 채택하여야 하고, 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도 동일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제한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면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

문 7. 당선인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 ④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문 8. 기본권보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보호의무에서 특정조치를 취해야 할 또는 특정법률을 제정해야 할 구체적인 국가의 의무를 이끌어 낼 수 없다.
- ②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규정을 두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은 아니다.
- ③ 일정한 한약서에 수재된 품목에 대해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제4호 등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구인들의 보건권을 침해하였다.
- ④ 담배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구 담배사업법은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

문 9.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의자와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문 10.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공무원보수의 책정에 있어서,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본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사 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에 있어 지방의회의원과 국회의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서로 비교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모든 관점에서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 요소에 있어서만 동일한 경우에, 두 개의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다.
- ④ 다른 자격시험 내지 사법시험 응시자와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있다.

문 1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17. 12. 4. 재물손괴 및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2018. 4. 6.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금지조항)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는데, 2017. 12. 19.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형종상향금지조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2조에서 형종상향금지조항의 시행일인 2017. 12. 19.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甲은 2018. 4. 12.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소송 계속 중 위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① 범죄행위시가 아닌 정식재판청구시를 기준으로 불이익변경금지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조항에 따르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형종상향금지조항 시행 전에 범죄행위를 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과 형종상향금지조항 시행 전에 범죄행위를 하였으나 위 조항 시행 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②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은 소급적인 범죄구성요건의 제정과 소급적인 형벌의 가중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이는 형벌법규로 하여금 허용된 행위와 금지된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그에 위반한 경우 어떠한 처벌이 정해져 있는가를 미리 개인에게 알려 자신의 행위를 그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데 근본취지가 있다.
- ③ 불이익변경금지조항이나 형종상향금지조항은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면서, 그 남용을 방지하거나 사법자원을 적정하게 분배한다는 등의 정책적인 고려를 통하여 선고형의 상한에 조건을 설정하거나 조정하는 내용의 규정들이다.

- ④ 형종상향금지조항의 시행 전에 범죄행위를 하고 위 조항의 시행 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래의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가벌성의 신설이나 추가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의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문 12.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양심상의 결정이란 선과 악의 기준에 따른 모든 진지한 윤리적 결정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이러한 결정을 자신을 구속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양심상의 심각한 갈등이 없이는 그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② 양심의 자유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되지 아니하며, 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자기를 표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 ③ 법률판단의 문제는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무관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그 내용이 동화되거나 수렴될 수 있는 포용성을 가지는 분야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영역에 포함된다.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형사처벌을 통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 즉,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문 13.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소급입법은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②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 조항을 2009. 1. 1.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③ 1945. 8. 9. 이후 성립된 거래를 전부 무효로 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등은 진정소급입법으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④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을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부분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문 18.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 기관인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하고 그 궐위 시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의장·부의장의 사임을 처리하며, 필요할 때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그 직원을 임명하고 교섭단체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등은 모두 자율적인 국회내부의 조직구성행위이다.
- ② 국회는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③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도 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
- ④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20명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문 19.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으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 ② 하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상위법령이 위임한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 법령조항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수권법령조항 자체가 위임하는 사항과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관련 법규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위임받은 내용과 범위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범위 안에서 규정된 하위법령 조항 이더라도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 ④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본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 20.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9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② 입법자는 헌법의 구속을 받고,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행정부와 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③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헌법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④ 재신임 국민투표는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않으나, 대통령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문 21.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95조는 부령에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은 당연히 법률의 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②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대통령이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파병 정책을 심의, 의결한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헌법상 정부의 구성단위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의 형태로 설치하거나 ‘행정각부’에 속하는 기관으로 두어야 하므로, 법률로써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

문 22.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2/3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명령 또는 규칙이라 함은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이른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 또는 규칙을 의미한다.
- ② 헌법 제110조 제1항에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의미는 군사법원을 일반법원과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달리하여 특별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③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와 판결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으로서 15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하고, 군판사는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문 23. 권리구제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떠한 국가기관이나 기구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조직규범은 원칙적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하고, 일반 국민은 그러한 조직규범에 의해 자기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령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하므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 사무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그 대표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다.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상명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감독기관의 지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한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상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 지구대장 등에게 보내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규칙조항)에 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 24.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소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후소인 당해사건의 법원이 그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 ②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 ③ 당해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인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우리 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되는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
- ④ 당해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거나 재심청구가 기각되어 원칙적으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들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재심청구가 기각된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문 25.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심사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넓은 의미의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 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입법권의 불행사)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결함이 있는 입법권의 행사)가 있다.
-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법률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될 경우라도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 없다.
- ③ 형사보상법은 형사사법작용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행정작용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상 구급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처음부터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 ④ 행정작용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에 대하여 형사보상법과 동일한 정도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을 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

행 정 법 (07)

문 1.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 ② 외국에 국군을 파견하는 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은, 비록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켰음이 명백하더라도, 헌법이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이상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대법원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및 이 과정에서 정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등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④ 한미연합 군사훈련을하기로 한 결정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사 및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관계 등 관련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의 결과로서 통치행위에 해당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 2.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관습법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그 행정관행이 적법한 경우 행정기관은 그 준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 ②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③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④ 지방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이에 근거한 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생년월일 기재에 대하여 처음 임용된 때부터 약 36년 동안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한 후 그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문 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②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대상인 사업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③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 체육시설업자는 적법한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부인당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그로 하여금 이러한 수리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맞는다.
- ④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수리된 후 甲의 주민등록번호가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유출되어 甲이 관할 행정청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경우,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문 4. 「국세기본법」상 처분의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면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③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문 5. 계획변경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계획이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없다.
- ② 도시·군관리계획 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봉안시설(구 납골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을 입안권자인 군수가 반려한 행위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구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당해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 ④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으며, 그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문 6.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의 설립인가처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의 단체결성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
- ②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는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기본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③ 행정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는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 ④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인가가 있더라도 그 기본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문 7. 부관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하며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뿐 아니라 처분 전·후의 법령상태를 모두 살펴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담의 전제가 된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부담의 효력은 소멸한다.
- ② 행정청이 객관적으로 처분상대방이 이행할 가능성이 없는 조건을 붙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건축행정청은 신청인의 건축계획상 하나의 대지로 삼으려고 하는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가 관계법령상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인지를 심사하여 토지분할이 관계법령상 제한에 해당되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 부관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부관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때에는 그 부관은 무효이다.

④ 부관은 면허 발급 당시에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 이후에 붙이는 것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문 8.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 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수 없다.
-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 ④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문 9.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선행처분인 대집행제고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위 대집행제고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 ②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룰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룰 수 없다.
- ③ 조세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조세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에 근거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나,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이다.
- ④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룰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문 10.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의 단원 위촉은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이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근무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여 광주광역시와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 ②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③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산업입주단지 입주계약의 해지통보는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문 11.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정보가 내용상으로는 정확하지만 행정조사가 실체법상 또는 절차법상 한계를 넘어 위법한 경우, 그 행정조사의 위법은 행정행위를 위법하게 만든다.
- ② 판례에 의하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③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나, 만약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④ 세관공무원이 밀수품을 신고 왔다는 정보에 의하여 정박중인 선박에 대하여 수색을 하려면 선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법관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문 12.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건물에 대한 2011. 5. 9.자 건축허가를 받은 甲이 건축 중인 건물을 乙에게 양도하였는데, 乙이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사용승인 없이 건물을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관할 행정청이 甲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甲은 이의제기 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의 위법을 주장하여야 한다.
-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대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특별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③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결국 그 반려처분이 취소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기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 ④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

문 13.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입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 ②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 ③ 과태료는 행정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④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고,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문 14. 국가배상법상 법령위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이른바 ‘법령에 위반하여’라 함은 일반적으로 위법행위를 함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한 행정적인 내부규칙에 위배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우선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될 여지가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상수원수의 수질기준에 미달하는 하천수를 취수하거나 상수원수 3급 이하의 하천수를 취수하여 고도의 정수처리가 아닌 일반적 정수처리 후 수돗물을 생산·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공급된 수돗물이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고 몸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위와 같은 수돗물 생산·공급행위가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 ④ 수익적 행정처분인 허가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행정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목적 등을 자세하게 살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집행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문 15.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행정주체로서 행하는 공행정작용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이 정하는 손실보상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②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는 있으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는 없다.
- ③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에 한하고, ‘관계인’은 당사자적격이 없다.
- ④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토지소유자에게 있다.

문 16. 토지행정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②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청은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③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에는 환지처분의 일부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만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④ 환지계획은 환지에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17.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재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원의 심사청구를 인용하거나 원징계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원 징계처분이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이면 처분청은 불복할 수도 없지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이면 그 학교법인 등은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는 소극적 소송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문 18.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나, 그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라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②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의 파면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해임만 효력을 발생하므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파면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교원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
- ③ 환지처분은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므로, 그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 ④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어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문 19. 기속력과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새로운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② 甲은 구청장 A에게 유흥주점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항소하여 제2심에서 인용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A가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甲은 제2심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명령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그 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이후 이러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 ④ 무효확인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취소소송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다시 취소소송이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할 수 있다.

문 2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행정심판법상의 의무이행심판청구에 대응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가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는 부적법하다.
- ③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이 대내외에 공표된 4급 공무원으로부터 소청심사를 통한 승진임용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그에 대하여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행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 ④ 행정청 A가 甲에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나 공사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되어 甲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가 아무런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甲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간접강제 제도는 활용할 수 없다.

문 21.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개발부담금 중 부과처분 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리상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 등 개발부담금의 환급에 필요한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므로, 부과처분 후에 납부된 학교용지부담금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의 환급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은 공법인이므로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그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③ 당사자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인 민사소송을 병합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는 당사자소송을 병합할 수 없다.
- ④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문 22.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써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재산권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학문상 인가의 성질을 갖는다.
- ③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뜻한다.
- ④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토지거래계약이라고 하여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그것은 확정적 무효이며, 사후에 허가를 받는다 하여도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될 수는 없다.

문 2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인 거부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바로 최초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② 구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③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합목적성에 관한 판단을 대상으로 하나,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문 24.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경우,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더라도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있다.
-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한 경찰관의 범죄예방을 위한 제지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이자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는, 가족 등에게 그 사람을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에 있어서, 불심검문의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문 25.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뿐만 아니라 기관위임사무도 주민감사청구의 대상이 되며,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 ② 감사기관이 해당 주민감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오인하거나 구체적인 조사나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각하결정을 한 경우, 감사청구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위법한 각하결정 자체를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③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은 감사청구한 사항과 동일할 필요는 없고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
- ④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행 정 학 (08)

문 1. 공무원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직업공무원제는 강력한 신분보장, 폐쇄적 임용, 일반행정가주의를 지향한다.
 ㄴ. 엽관주의는 통치권자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원활한 정책추진에 도움을 준다.
 ㄷ. 실적주의는 전문행정가주의를 지향하며 정치적 변동에 대응하기 유리하다.
 ㄹ. 대표관료제는 감축관리와 충돌하지만, 행정의 전문성 제고에 유리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 직접성의 정도가 가장 높은 정책수단은?

- ① 사회적 규제 ② 경제적 규제
 ③ 바우처 ④ 정부보증

문 3. 균형성과표(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BSC는 재무와 비재무, 외부와 내부, 선행과 후행, 단기와 장기간에 균형을 이루는 성과관리체제이다.
 ② BSC의 성과지표들은 학습과 성장 관점의 성과동인으로 부터 재무 관점의 향상된 재무성과에 이르기까지 인과관계로 연계되어야 한다.
 ③ BSC는 부서별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조직전체의 목표를 작성하는 상향적 접근방식을 추구한다.
 ④ 기업의 BSC는 재무관점을 중시하지만, 행정의 BSC는 사명달성의 성과를 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다.

문 4. 블랙스버그 선언(Blacksburg Manifes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탈관료제와 반직업공무원제를 주창한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② 관료제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온 것은 관료제의 진정한 문제에 기인하기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정부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재창조가 아니라 정부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④ 공사행정이원론이면서 정치행정일원론의 관점에서 행정의 정체성 확립을 주창하였다.

문 5.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포스트모더니티(Postmodernity)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대설화(meta narratives)에 대한 믿음을 견지한다.
 ② 탈영역화(deterritorialization)와 해체(deconstruction)를 추구한다.
 ③ 상상(imagination)을 중시한다.
 ④ 다양성을 선호하고 타인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갖는다.

문 6.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주민자치형 국가보다 단체자치형 국가에서 필요성이 높다.
 ② 전문행정의 성격을 띠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광역적 행정에 잘 대응하게 한다.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④ 이원적 업무수행으로 종합행정을 저해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문 7.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회계 외의 별도의 회계를 설치한다는 점에서 예산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이다.
 ② 기업특별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에 근거하여 설치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국가재정법」 별표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③ 세입은 사업소득, 부담금, 수수료, 전입금 등이며, 세출은 특정세출에 충당한다.
 ④ 입법부와 국민에 의한 예산통제를 강조한다면 특별회계의 수는 많을수록 바람직하다.

문 8. 윌슨(J. Q. Wilson)의 규제정치이론 중 다음의 상황과 관련된 것은?

- 규제의 비용은 동질적인 특정소수에게 집중되어 개인으로 보면 그 크기는 큰 반면, 편익은 불특정다수에게 분산되어 개인으로 보면 그 크기가 작은 상황이다.
 ○ 환경규제, 식품안전규제, 원자력안전규제 등 대부분의 사회적 규제가 이에 속한다.

- ① 대중정치상황
 ② 이익집단정치상황
 ③ 기업가정치상황
 ④ 고객정치상황

문 9.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맥그리거(McGregor)는 Y이론적 관리전략으로 MBO 등을 통한 개인목표와 조직목표의 통합을 지향하였다.
 ㄴ. 헤르츠버그(Hackman)와 올드햄(Oldham)이 제시한 잠재적 동기지수(MPS)에 의하면 다양한 직무특성 중에서 자율성과 환류가 동기부여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ㄷ. 허츠버그(Herzberg)는 조직구성원에게 만족을 주는 요인과 불만족을 주는 요인은 상호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ㄹ. 포터와 로러(Porter & Lawler)는 만족감을 중시하여 만족이 성과에 선행된다고 보았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0.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5년 이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2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 ②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3년 이내에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의 1/4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③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2/3를 감한다.

문 11. 시장실패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
|---|
| ㄱ.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 공적공급, 정부규제 |
| 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현상 - 공적유인, 정부규제 |
| ㄷ.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재화의 존재 - 공적공급, 공적유인 |
| ㄹ. 독과점 형성 등 불완전경쟁 - 정부규제 |
| ㅁ.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당 생산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 산업 - 공적공급, 정부규제 |

-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문 12. 의사결정모형은 합리성에 대한 가정이 각각 다양하다. 순수합리성의 왜곡이 가장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
|--------------------------------|
| ㄱ. 하버마스(Habermas)의 합리성 |
| ㄴ. 선형계획에서의 합리성 |
| ㄷ. 린드블롬(Lindblom)의 점증주의에서의 합리성 |
| ㄹ. 사이먼(Simon)의 만족모형에서의 합리성 |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ㄴ → ㄷ → ㄹ → ㄱ
- ③ ㄴ → ㄹ → ㄷ → ㄱ
- ④ ㄴ → ㄱ → ㄹ → ㄷ

문 13. 직위분류제 수립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 | |
|-------------|---------|-------|
| ㄱ. 직급명세서 작성 | ㄴ. 직무조사 | ㄷ. 정급 |
| ㄹ. 직무평가 | ㅁ. 직무분석 | |

- ① ㄴ → ㄱ → ㄹ → ㅁ → ㄷ
- ② ㄴ → ㄷ → ㄹ → ㅁ → ㄱ
- ③ ㄴ → ㅁ → ㄹ → ㄱ → ㄷ
- ④ ㄴ → ㅁ → ㄹ → ㄷ → ㄱ

문 14. 예산의 신축성 유지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계속비의 연한은 원칙적으로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지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 없이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예비비를 책정하여 총액으로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문 15.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약하면서도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성과측정이 용이한 사무에 설치된다.
- ② 책임운영기관 공무원의 총정원 한도는 법률로 정하고, 종류별·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책임운영기관과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책임운영기관 모두 초과수입금을 직·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문 16.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블레이크와 모튼(Blake & Mouton)의 관리망이론에서는 리더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을 통해 육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허쉬와 브랜차드(Hersey & Blanchard)는 부하의 성숙도를 상황변수로 보고, 부하의 성숙도가 가장 높은 경우에는 참여형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 ③ 피들러(Fiedler)는 '가장 좋아하지 않는 동료(LPC: least preferred coworker)'라는 척도에 의하여 리더십을 '관계지향형'과 '과업지향형'으로 구분하였다.
- ④ 하우스와 에반스(House & Evans)는 상황요인으로 부하의 특성과 근무환경의 특성을 제시하고 리더십의 유형을 지시형, 지원형, 참여형, 성취형으로 구분하였다.

문 17. 신공공관리론이 추구한 행정개혁방안으로 옳은 것은?

- ①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통합한 책임행정체제 확립을 지향하였다.
- ② 대규모 통일적 행정조직을 탈피하여 공공조직을 산출물 단위로 분화시키고자 하였다.
- ③ 공익을 법률로 표현된 의사로 보며, 성과에 의한 사후적 통제를 강조하였다.
- ④ 행정부패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문 18.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진실험은 무작위배정을 통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하는 실험으로 내적 타당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실험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다.
 ㄴ. 준실험은 짝짓기(matching) 방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정책영향을 평가하거나, 시계열적인 방법으로 정책영향을 평가한다.
 ㄷ. 준실험은 자연과학과 같이 대상자들을 격리하여 실험하기 때문에 호손효과(Hawthorne effect)를 강화시킨다.
 ㄹ. 비실험은 단일집단 사전·사후연구가 일반적으로 활용되며, 허위변수나 혼란변수 등 외생변수의 개입이 커 내적 타당성이 낮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9. 우리나라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모든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한다.
 ② 소청심사는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된다.
 ④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나 승진탈락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 20. 예산제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결정이나 대안선택의 유형으로서 성과주의예산(PBS)은 점증주의를 따르는 반면, 계획예산(PPBS)은 포괄적인 총체주의를 따르고 있다.
 ② 품목별 예산(LIBS)에서는 회계학적 지식이 요구되지만, 계획예산(PPBS)은 경영학 및 행정학적 지식이 요구된다.
 ③ 결정의 흐름과 관련하여 품목별 예산(LIBS)과 성과주의예산(PBS)은 상향적이며 위로 통합되고 있으나, 계획예산제도는 하향적이다.
 ④ 예산기관의 역할을 보면 품목별 예산(LIBS)에서는 통제와 감시에, 성과주의예산(PBS)에서는 관리에 관심을 두고 있다.

문 21. 집단적 의사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쓰레기통모형은 참여자들이 특정 주제에 대하여 집착적인 선호를 보이는 경우 설명이 용이하다.
 ② 엘리스모형Ⅱ는 SOP에 의하여 프로그램 목록에서 대안을 추출하고 권력은 반독립적인 하위조직에 분산되며, 정부는 느슨하게 연결된 연합체로 간주한다.
 ③ 사이버네틱스모형은 정책결정과정을 정책결정자의 기대가치나 기대효용을 최적화하는 과정으로 본다.
 ④ 연합모형은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거래관행을 수립하거나 단기적 환류에 의존하는 의사결정절차를 배제한다.

문 22. 건전재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
 ② 총사업비관리제도와 예비타당성조사
 ③ 법률안 재정 소요 추계제도
 ④ 세계잉여금 처리용도 제한

문 23. 행정학 성립에 영향을 준 윌슨(Wilson)의 ‘행정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 1887)’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의 부패를 야기하는 정당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하고자 하였다.
 ② 펜들턴(Pendleton)법에 의해 추진된 실적주의 인사제도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였다.
 ③ 행정은 국가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을 중심 기능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④ 관료는 전문성보다는 대표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문 24. 뉘닉(Dubnick)과 롬젝(Romzek)에 의할 때 행정통제의 소재는 내부에 있으나 통제의 강도가 높을 때의 행정책임은?

- ① 정치적 책임
 ② 전문가적 책임
 ③ 법적 책임
 ④ 계층적 책임

문 25. 넛지(Nudge)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학문적 토대 — 행동경제학
 ② 합리성 — 제한된 합리성
 ③ 이념적 기초 — 신자유주의
 ④ 근거 — 행동적 시장실패

세 법 (15)

문 1.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한다.
- ②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 소멸시효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 ③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 ④ 중단된 소멸시효는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문 2.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 ㄴ.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ㄷ.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ㄹ.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제외)를 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① ㄷ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문 3.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 ②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해당되어 납부고지를 받기 전에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담보권자의 대금채무와 양도담보설정자의 피담보채무를 상계하였으면 양도담보권은 이미 소멸한 것이므로 물적납세의무를 지을 수 없다.
- ③ 제2차 납세의무자는 본래의 납세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소유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④ 동산, 유가증권, 채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과 그 이외에 법률상으로 아직 권리로 인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도 양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된다.

문 4.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국세와 관련된 심판청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서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④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문 5.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
- ②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③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에 대한 결과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문 6. 국세기본법 중 국세우선권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 ② 지방세 채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등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 보다 우선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 ④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국세징수법」 제61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를 포함)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문 7.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이 제5기(2024. 1. 1. ~ 12. 31.) 사업연도에 수령한 수입배당금(「법인세법」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수입배당금은 아님) 중 익금불산입액은? (단, (주)한국은 지주회사가 아니고, 제5기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입금의 이자는 없으며, 보유 중인 주식은 모두 배당기준일 현재 1년 이상 보유한 것이다)

배당지급법인	지분비율	수입배당금액	비고
(주)A	30 %	1,000,000원	상장내국법인
(주)B	10 %	2,000,000원	상장내국법인
(주)C	60 %	3,000,000원	상장내국법인

- ① 4,400,000원 ② 4,600,000원
- ③ 5,500,000원 ④ 6,000,000원

문 8. 법인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 ②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 ③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문 9.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 ②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기타사의 유출로 처분한다.
- ③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은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다.
- ④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한다.

문 10.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으로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이내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
- ②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법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
- ③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 ④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문 11. 법인세법상 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2천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을 손금으로 한다.
- ②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이므로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과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그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외에 비용지출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 ④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문 12.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 ②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되,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③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 ④ 매출할인금액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문 13. 甲법인의 제10기 사업연도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을 한 후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유보잔액은? (단, △는 시인부족액이다) (단위: 원)

구분	건물	비품	기계장치
전기말시부인액	300,000	△400,000	600,000
회사상각액	1,200,000	700,000	-
상각범위액	1,400,000	800,000	400,000

- ① 200,000원 ② 500,000원
- ③ 300,000원 ④ 600,000원

문 14.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및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근로소득금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된다.
- ② 기본공제대상자가 추가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사유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 ③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 ④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문 15.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 ② 집합투자기금으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한다.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 ③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 ④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문 16.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 ②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거주자의 상여,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 된 금액이 있는 경우 실제 양도금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 ③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아니한다.
- ④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문 17.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하여야 한다.
- ② 국내에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그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 ③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 ④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문 18. 소득세법 중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②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 19.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재고매입세액 등으로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 ③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대가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④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문 20.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②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는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 ④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문 21.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국세징수법」상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예정고지에 따른 징수는 하여야 한다.
- ② 외국법인(신규사업개시자 아님)은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 ④ 조기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문 22.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으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③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에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④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23.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④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문 24. 국세징수법상 보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할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등의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문 25.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하여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강제징수비의 징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강제징수비의 금액, 산출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강제징수비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강제징수비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②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 ③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관할 세무서장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회 계 학 (13)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하며,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음

문 1.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높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 ②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및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 ③ 재고자산의 수량결정방법 중 실지재고조사법만 적용 시 파손이나 도난이 있는 경우 매출원가가 과소평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 ④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재고청산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선입선출법의 매출원가가 다른 방법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난다.

문 2.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제시한 측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정가치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거래원가로 인해 증가할 수 있다.
- ② 공정가치와 역사적원가는 유입가치에 해당한다.
- ③ 사용가치는 기업 특유의 가정보다는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한다.
- ④ 현행원가를 기반으로 한 이익은 역사적원가를 기반으로 한 이익보다 미래 이익을 예측하는 데 더 유용하다.

문 3. (주)한국은 모든 매출거래를 매출채권 증가로 처리한다. 20×1년과 20×2년 중 회수불능이 확정되어 제거된 매출채권은 없으며, 회수불능으로 회계처리했던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한 내역도 없을 때, 옳지 않은 것은?

계정과목	20×1년	20×2년
기말 매출채권	₩95,000	₩100,000
기말 손실충당금	15,500	17,000
매출액	950,000	980,000
손상차손	15,500	?

- ① 20×2년 초 매출채권의 전기이월액은 ₩95,000이다.
- ② 20×1년 초 손실충당금의 전기이월액은 ₩0이다.
- ③ 20×2년 손상차손은 ₩1,500이다.
- ④ 20×2년 중 현금 회수된 매출채권은 ₩976,500이다.

문 4.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취득원가는?

○ 구입가격	₩1,050
○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원가	100
○ 신제품 광고 및 판촉활동 관련원가	60
○ 정상작동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100
○ 시험가동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	20
○ 다른 기계장치의 재배치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50

- ① ₩1,050
- ② ₩1,150
- ③ ₩1,230
- ④ ₩1,250

문 5. (주)한국은 20×1년 초 4년간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총 계약금액 ₩100,000의 용역계약을 수주하였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3년도 용역계약이익은? (단, 진행률에 의해 계약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총추정계약원가 대비 누적발생계약원가로 산정한다.)

구분	20×1년	20×2년	20×3년	20×4년
누적발생계약원가	₩24,000	₩52,000	₩68,000	₩80,000
추가소요예정원가	56,000	28,000	12,000	-

- ① ₩4,000
- ② ₩5,000
- ③ ₩6,000
- ④ ₩7,000

문 6. (주)한국이 20×1년 말 실지재고조사한 재고자산 원가는 ₩50,000으로 파악되었다. (주)한국이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추가사항을 고려할 경우 정확한 기말재고자산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 20×1년 12월 27일 (주)대한으로부터 FOB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인 상품의 원가는 ₩15,000이며, 이 상품은 20×2년 초 (주)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 (주)한국이 20×1년 중 구매자에게 시용판매의 목적으로 인도한 상품의 원가는 ₩20,000이며, 기말 현재 구매자는 이 상품에 대해 30%의 구매의사 표시를 하였다.
○ (주)한국의 20×1년 말 실사한 재고자산 중 ₩20,000은 주거래은행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 중이며, 저당권은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
○ (주)한국이 20×1년 중 위탁판매를 위해 수탁자인 (주)민국에게 적송한 상품의 원가는 ₩15,000이며, 기말 현재 (주)민국은 60%의 판매완료료를 통보해 왔다.

- ① ₩70,000
- ② ₩77,000
- ③ ₩85,000
- ④ ₩91,000

문 7. (주)한국은 20×1년 초 현금 ₩1,000,000을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이는 재고자산 200개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기중에 물가가 3% 상승하였으며, 기말 순자산은 ₩1,500,000이다. 20×1년 말 동 재고자산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개당 ₩6,000이라면, 실물자본유지개념에 의한 당기이익은? (단, 기중 자본거래는 없다.)

- ① ₩270,000 ② ₩300,000
③ ₩320,000 ④ ₩420,000

문 8. (주)한국은 20×1년 초에 제품을 ₩300,000에 판매(제품을 실질적으로 인도함)하면서, 판매대금 중 ₩100,000은 판매 즉시 수취하고 나머지 ₩200,000은 향후 2년에 걸쳐 매년 말에 각각 ₩100,000씩 받기로 하였다. 동 거래에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판매계약의 할인율은 연 10%로 동 할인율은 별도 금융거래에 적용될 할인율에 해당한다. 판매대금의 회수가능성이 확실하다고 가정할 때, 상기 제품의 판매거래로 (주)한국이 20×1년에 인식하게 될 수익의 총액은? (단, 현재가치 계산시 다음의 현재표를 이용하며, 단수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기간	연 이자율 10%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2	0.8264	1.7355
3	0.7513	2.4868

- ① ₩273,559 ② ₩290,905
③ ₩300,905 ④ ₩330,000

문 9. 다음 중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처리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금주의로 회계처리한 것을 발생주의로 변경한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③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④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다.

문 10.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총매출액은?

○ 기초상품재고	₩6,000	○ 매출에누리	₩1,500
○ 총매입액	₩14,000	○ 매출할인	₩2,500
○ 매입환출	₩1,000	○ 매출운임	₩3,000
○ 매입할인	₩2,000	○ 매출총이익률	20%
○ 기말상품재고	₩9,000		

- ① ₩12,500 ② ₩14,000
③ ₩15,250 ④ ₩17,000

문 11.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주)대한의 주식 200주를 취득일의 공정가치인 주당 ₩1,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시 추가로 ₩5,000의 거래원가가 발생하였으며, (주)한국은 해당 주식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9월 1일 (주)한국은 취득한 주식의 50%를 처분일의 공정가치인 주당 ₩800에 처분하였다. 20×1년 말 (주)대한 주식의 주당 공정가치가 ₩1,300일 때, 동 주식과 관련하여 (주)한국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 ① ₩2,000 ② ₩3,000
③ ₩4,000 ④ ₩5,000

문 12. (주)한국의 내년 예상손익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간 생산·판매량이 20% 증가한다면 영업이익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 단위당 판매가격 ₩2,000	○ 변동원가율	70%
○ 손익분기점 판매량 300개	○ 연간 생산·판매량	400개

- ① ₩48,000 ② ₩54,000
③ ₩56,000 ④ ₩60,000

문 13. (주)한국의 20×1년 제조간접원가 표준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수량표준	표준배부율
변동제조간접원가	2시간	₩5
고정제조간접원가	2시간	4

20×1년 제조간접원가의 기준조업도는 2,500직접노무시간, 실제 발생한 직접노무시간은 2,750시간이다. 20×1년 제조간접원가의 조업도차이는 ₩2,000(불리)이었다. 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는?

- ① ₩1,250(유리) ② ₩1,250(불리)
③ ₩2,450(유리) ④ ₩3,750(불리)

문 14. (주)한국의 20×2년도 제품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 일부가 다음과 같을 때 당기총제조원가는?

제품 매출원가	₩500,000
기초 제품재고액	100,000
기말 제품재고액	150,000
기초 재공품재고액	50,000
기말 재공품재고액	25,000

- ① ₩475,000 ② ₩500,000
③ ₩525,000 ④ ₩550,000

문 15. (주)한국의 평균총자산액은 ₩40,000이고, 매출액순이익률은 5%이며, 총자산회전율(평균총자산 기준)이 3회일 경우, 당기순이익은?

- ① ₩4,000 ② ₩5,000
③ ₩6,000 ④ ₩8,000

문 16. (주)한국은 20×1년 초 3년 만기 사채를 할인발행하여 매년 말 액면이자를 지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 20×2년 말 사채 장부금액이 ₩98,148이고, 20×2년 사채이자 관련 분개는 다음과 같다. 20×3년 이자비용은?

(차) 이자비용	7,715	(대) 현 금	6,000
		사채할인발행차금	1,715

- ① ₩7,852 ② ₩7,915
③ ₩8,142 ④ ₩8,350

문 17.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100,000이고, 장기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5,000이며,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11,000이다. 당기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의 당기 영업활동 순현금유입액은? (단, 이자의 지급과 수취는 각각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 재고자산의 증가	₩8,000
○ 매출채권(손실충당금 차감후 순액)의 감소	₩3,000
○ 매입채무의 감소	₩4,200
○ 선수금의 증가	₩2,000

- ① ₩81,800 ② ₩92,800
③ ₩106,000 ④ ₩108,800

문 18. (주)한국은 부품 A를 자가제조하고 있다. 연간 5,000단위의 부품 A를 자가제도시 단위당 제조원가는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원가	₩120
직접노무원가	150
변동제조간접원가	80
고정제조간접원가	250
계	₩600

(주)민국은 (주)한국에게 부품 A를 단위당 ₩550에 연간 5,000단위를 납품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주)한국이 이를 수락할 경우 유희시설을 임대하여 연간 ₩600,000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부품 A에 배부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단위당 ₩100만큼 회피가능하다. 다음 중 옳은 것은?

- ① 외부구입시 연간 ₩100,000만큼 이익 증가
② 외부구입시 연간 ₩125,000만큼 이익 증가
③ 자가제도시 연간 ₩75,000만큼 이익 증가
④ 자가제도시 연간 ₩100,000만큼 이익 증가

문 19.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보고서 상 일반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 등으로 인한 순자산 증가는 수익에 포함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표상 부채의 가액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문 20. 다음은 중앙관서 A부처의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거래이다. 다음 거래가 A부처의 일반회계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 20×3년 중에 프로그램 순원가로 ₩100,000이 발생하였다.
○ 20×3년 중에 행정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50,000, 감가상각비 ₩30,000이 발생하였다.
○ 20×3년 중에 B부처로부터 무상관리환으로 ₩30,000의 자산을 수증받았다.
○ 20×3년 중에 부담금 수익 ₩70,000에 대한 청구권이 확정되었다.

- ① ₩80,000 증가 ② ₩110,000 증가
③ ₩150,000 증가 ④ ₩180,000 증가

문 2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관리·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용역 잠재력이 취득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장기연불조건의 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도 명목가액으로 평가한다.
③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투자목적의 장기투자증권 또는 단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표시한다.

문 22.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된다.
- ㄴ. 기업이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기업이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한다.
- ㄷ.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한다.
- ㄹ.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현재가치로 할인한다.

- ① $\neg$, $\sqsubset$
- ② $\neg$, $\sqsupset$
- ③ $\sqcup$, $\sqsubset$
- ④ $\sqcup$, $\sqsupset$

문 23. (주)한국의 20×1년 초 자본내역과 20×2년 2월 개최한 주주총회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주총회 결의 후 (주)한국의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은?

- 20×1년 초 자본내역 : 보통주자본금 ₩50,000(단, 보통주자본금 변동 없음)
 배당평균적립금 ₩500
 미처분이익잉여금 ₩150
- 20×1년도 당기순이익 : ₩4,000
- 20×2년 2월 28일 주주총회 결의내용
 - 배당평균적립금 이입 : ₩500
 - 현금배당 : 보통주자본금의 3%(현금배당 시 상법의 규정에 따라 1/10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 주식배당 : ₩300
 - 사업확장적립금 적립 : ₩100

- ① ¥2,100 ② ¥2,600
③ ¥2,750 ④ ¥2,900

문 24. (주)한국이 다음 거래를 수정분개 할 경우,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 3월 1일 외상매출로 인한 매출채권 ₩100,000을 3월 20일에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 5월 1일 정기예금(1년 만기, 이자율 연 12%)에 ₩1,000,000을 예금하였다.
- 6월 1일 1년 만기 보험으로 ₩24,000을 지급하고 선급보험료로 회계처리하였다.
- 9월 1일 건물 임대계약으로 3년치 임대료 ₩360,000을 수령하고 임대료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 10월 1일에 은행으로부터 ₩2,000,000(이자율 연 15%)을 차입하였다.
- 12월 31일 소모품 계정잔액은 ₩200,000이나 소모품 미사용액은 ₩80,000이다.

- ① ₩191,000 감소 ② ₩381,000 감소
③ ₩449,000 감소 ④ ₩820,000 감소

문 25. (주)한국은 20×1년 1월 종업원 50명에게 향후 3년 동안의 계속 근무 용역제공조건으로 가득되는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을 1명당 30개씩 부여하였다. 권리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개당 공정가치는 ₩10(향후 변동 없음)으로 추정되며, 연도별 종업원 퇴직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의 20×2년 말 재무상태표상 주식선택권 장부금액은?

연도	실제 퇴직자수	추가 퇴직 예상자
20×1년	5명	10명
20×2년	3명	12명

- ① ₩1,000 ② ₩2,000
③ ₩3,000 ④ ₩6,000

경 제 학 (09)

- 문 1. 기회비용과 매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어떤 행위의 선택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미 지출된 매물 비용을 포함하여야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
 - ② 기회비용은 실제로 지출된 회계비용을 의미한다.
 - ③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여러 대안의 가치 중에 가장 작은 가치이다.
 - ④ 모든 대안들의 편익이 동일하다면 기회비용이 가장 작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문 2. 갑 기업이 하나의 생산 요소를 투입해 구두(X재)와 핸드백(Y재)을 만들 때, 두 점(X재 생산량, Y재 생산량) A(10, 20)와 B(15, 18)가 갑 기업의 생산가능곡선 상에 있고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 성립한다면 갑 기업의 생산가능곡선 상의 점으로 옳은 것은?
- ① (8, 21) ② (10, 18)
 - ③ (18, 15) ④ (21, 16)

- 문 3. 독점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독점기업의 공급곡선은 없다.
 ㄴ.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ㄷ. 한계수입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의 한계수입이 독점가격이 된다.

- ① ㄱ ② ㄷ
- ③ ㄱ, ㄴ ④ ㄴ,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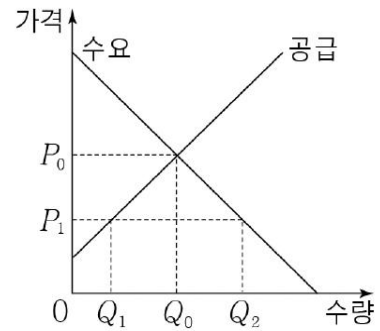
- 문 4. X재 시장의 수요함수는 $Q^D = 100 - P$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P는 X재의 가격, Q^D 는 X재의 수요량이다.)

ㄱ. X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ㄴ. X재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의 증가 함수이다.
 ㄷ. X재의 수요량이 75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다.

- ① ㄱ ② ㄴ
- ③ ㄱ, ㄷ ④ ㄴ, ㄷ

- 문 5.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무차별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 y는 각각 X재, Y재 소비량을 의미한다.)
- ① X재가 Y재의 완전 대체재라면 원점에서 멀리 떨어진 무차별곡선일수록 더 높은 효용 수준을 나타낸다.
 - ② X재와 Y재 중 하나만 비재화라면 무차별곡선은 우상향한다.
 - ③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면 한계대체율은 체감한다.
 - ④ 동일한 개인의 두 무차별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 문 6. 갑국의 X재 시장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갑국 정부는 P_1 에서 실효성 있는 가격 규제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격 규제 정책 시행 전에 비해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 ② 가격 규제 정책 시행 전에 비해 $Q_2 - Q_1$ 만큼 시장 거래량이 감소한다.
- ③ 가격 규제 정책 시행 후에는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 ④ 가격 규제 정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 문 7. 소비자가 X재를 x만큼 소비하고 Y재를 y만큼 소비할 때의 효용함수가 $U(x, y) = \sqrt{x} + \sqrt{y}$ 이다. 소득이 600이고 X재의 가격이 40, Y재의 가격이 20일 때, 소비자의 효용극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비자의 효용극대화를 위한 X재의 양은 5이다.
- ② 소득이 2배로 증가하면 최적의 소비점에서 소비자 효용도 증가한다.
- ③ 소비자 효용이 극대화되는 소비점에서의 한계대체율은 2이다.
- ④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자 효용이 극대화되는 소비점에서의 한계대체율도 증가한다.

- 문 8. 기업 1과 2가 차별화된 재화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하고 있다. 기업 1이 생산하는 재화의 수요곡선은 $q_1 = 4 - p_1 + p_2$ 이고, 기업 2가 생산하는 재화의 수요곡선은 $q_2 = 4 - p_2 + p_1$ 이다. 두 기업 모두 생산비용은 0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두 기업이 동시에 가격을 결정하는 모형의 내쉬균형에서 두 기업은 동일하게 가격을 4로 결정한다.
- ② 두 기업이 동시에 가격을 결정하는 모형보다,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모형에서 두 기업은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한다.
- ③ 두 기업이 순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모형에서 선도자(leader)의 이윤이 추종자(follower)의 이윤보다 더 크다.
- ④ 두 기업이 동시에 가격을 결정하는 모형보다,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모형에서 두 기업의 이윤은 더 크다.

- 문 9. 완전경쟁시장에서 단기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의 단기 비용 함수가 $C(Q) = 450 + Q^2$ 이고 시장 가격이 30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C는 비용, Q는 생산량이다.)

ㄱ.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조업을 중단한다.
 ㄴ. 기업의 생산수준은 15이다.
 ㄷ. 총수입으로 가변비용을 모두 충당하고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 문 10. 갑과 을의 전략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 구조이다. 갑이 전략 A를 선택할 확률을 p , 을이 전략 C를 선택할 확률을 q 라고 하자. 혼합전략 내쉬균형 하에서의 p, q 로 옳은 것은? (단, 보수 행렬의 괄호 안 첫 번째는 갑의 보수, 두 번째는 을의 보수를 나타낸다.)

		을	
		C	D
갑	A	(50, 50)	(80, 20)
	B	(90, 10)	(20, 80)

- ① $p: 0.4, q: 0.9$
 ② $p: 0.5, q: 0.8$
 ③ $p: 0.6, q: 0.7$
 ④ $p: 0.7, q: 0.6$

- 문 11. 정부가 기업의 노동수요를 진작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통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노동의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이 정책이 기업의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노동의 한계생산이 빠르게 체감하는 기업일수록 노동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②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다른 생산요소를 노동으로 대체하기 쉬운 기업일수록 노동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③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총생산비용 중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기업일수록 노동수요가 작게 증가할 것이다.
 ④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상품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기업일수록 노동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 문 12.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완전경쟁기업의 단기 노동수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단기 총생산곡선의 형태는 원점으로부터 고용량 증가에 따라 체증하다가 체감하며,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이다.)

- ① 노동의 평균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구간에서 노동의 한계생산은 노동의 평균생산보다 크다.
 ② 완전경쟁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자신의 노동의 한계생산가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을 결정한다.
 ③ 노동의 평균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구간에서 노동의 한계생산은 감소한다.
 ④ 단기 노동수요곡선은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곡선과 같다.

- 문 13. 개인 A와 B로 구성된 한 사회에서 개인의 소득이 각각 $I_A = 450$ 만 원, $I_B = 50$ 만 원이다. 개인 $i = A, B$ 의 효용함수가 $U_i = I_i$ 이고, 이 사회의 사회후생함수(SW)가 다음과 같을 때, 앳킨슨 지수(Atkinson index)는?

$$SW = \min(U_A, 2U_B)$$

- ① 0.20
 ② 0.40
 ③ 0.60
 ④ 0.80

- 문 14. 시장실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긍정적 외부성
 ② 규모에 대한 수익체감 기술
 ③ 비용체감 기술
 ④ 소비의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

- 문 15. A, B, C 3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공공재를 공급하려고 한다. 공공재에 대한 수요함수는 각각 $P_A = 10 - Q$, $P_B = 20 - 2Q$, $P_C = 7 - Q$ 이고 공공재를 생산하는 비용함수는 $C(Q) = 10 + 9Q$ 이다. 이때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공급량으로 옳은 것은?

- ① $\frac{34}{13}$
 ② 7
 ③ 8
 ④ 9

- 문 16. 화폐 및 화폐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② 이자율 상승은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 증가 요인이다.
 ③ 화폐는 가치척도의 기능, 교환 매개의 기능, 가치저장의 기능 등을 가진다.
 ④ 화폐를 보유하는 이유로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 투기적 동기를 들 수 있다.

- 문 17. 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환율이 올라간 직후에는 순수출이 줄어들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마셜-러너 조건이라고 한다.
 ② 구매력 평가설은 수출 규모를 측정하는 이론 모형이다.
 ③ 한국과 미국의 물가가 각각 3% 상승하고 명목환율이 변화가 없다면, 실질환율은 3% 상승한다.
 ④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한다면 한 국가의 금융 상품에 투자한 수익률은 환위험 헤징(hedging) 후 다른 국가의 금융 상품에 투자한 수익률과 동일하다.

문 18. A국에는 2개의 은행이 있고, 지급준비율을 제1 은행은 30%, 제2 은행은 20%로 항상 유지한다. 갑은 기준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 200만 원을 제1 은행에 예금하였고, 제1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을에게 대출하였다. 을은 대출 받은 돈을 모두 사용하여 병에게서 물품을 구입하였다. 병은 이 대금을 전액 제2 은행에 예금하였고, 제2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전액을 정에게 대출하였다. 이상의 거래에서 추가적으로 창출된 통화량은?

- ① 140만 원 ② 252만 원
③ 392만 원 ④ 492만 원

문 19.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경제정책의 내부시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ㄴ. 경기 회복기에는 경기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
ㄷ. 이에 해당하는 사례에는 누진적 소득세제와 실업보험 제도가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ㄷ

문 20. A국과 B국의 총수요와 총공급 변동에 따른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A국 : 총수요곡선, 총공급곡선 모두 우측으로 이동하였다.
B국 : 총수요곡선은 좌측, 총공급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였다.

- ① A국은 물가가 상승한다.
② A국은 실질 GDP가 감소한다.
③ B국은 물가가 하락한다.
④ B국은 실질 GDP가 증가한다.

문 21. 어느 한 국가의 기대를 반영한 필립스곡선이 다음과 같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π 는 실제 인플레이션율, π^e 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u 는 실업률이다.)

$$\pi = \pi^e - 0.5u + 2.2$$

ㄱ. 잠재 GDP에 해당하는 실업률은 4.4%이다.
ㄴ. 잠재 GDP에 해당하는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이 아니다.
ㄷ.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장기 필립스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ㄹ. 실제 실업률이 5%이면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낮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문 22. A국과 B국은 노동만을 사용하여 옷감과 포도주를 생산하고 있다. 양국은 비교우위에 따라 교역하며, 옷감과 포도주 각각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 투입량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가	쌀	반도체
A	4	6
B	16	8

ㄱ. A국은 쌀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ㄴ. 반도체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B국이 A국보다 크다.
ㄷ. 쌀 1단위와 반도체 3단위를 교환하는 조건이면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문 23. 다음의 거시경제 모형에서 완전고용 국민소득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정부지출은? (단, Y 는 국민소득, C 는 소비지출, I 는 투자지출, Y_F 는 완전고용 국민소득이다.)

$$\begin{aligned} Y &= C + I \\ C &= 200 + 0.8Y \\ I &= 200 \\ Y_F &= 3,000 \end{aligned}$$

- ① 200
② 400
③ 800
④ 1,000

문 24. 소규모 폐쇄경제인 A국의 X재에 대한 수요곡선은 $Q^D = 500 - P$, 공급곡선은 $Q^S = P - 100$ 이고, 국제가격이 400이다. A국이 경제를 개방할 때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D 는 X재의 수요량, Q^S 는 X재의 공급량, P 는 X재의 가격이다.)

- ① A국의 X재 공급량은 감소한다.
② A국은 X재를 수입하게 된다.
③ A국의 소비자잉여는 5,000이 된다.
④ A국에서 X재의 국내 거래량은 증가한다.

문 25. 갑국의 실업률은 2021년에 2020년보다 상승하였지만, 2022년에는 2021년과 같았다. 갑국의 고용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15세 이상 인구는 매년 증가하였고, 경제활동인구는 변함이 없다.)

- ① 2021년 취업자 수는 2020년보다 많다.
② 2021년 고용률은 2020년보다 상승하였다.
③ 2022년 고용률은 2021년보다 하락하였다.
④ 2022년 취업자 수는 2021년보다 적다.

교 정 학 (18)

문 1. 우리나라 교정사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감옥규칙」의 제정
 ㄴ. 4개 지방교정청의 신설
 ㄷ. 「행형법」의 제정
 ㄹ.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ㅁ.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확대 개편

- ① ㄱ → ㄴ → ㄷ → ㄹ → ㅁ
 ② ㄱ → ㄷ → ㄴ → ㄹ → ㅁ
 ③ ㄱ → ㄷ → ㄴ → ㅁ → ㄹ
 ④ ㄱ → ㄷ → ㄹ → ㄴ → ㅁ

문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귀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소장이 소속 기관의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분류처우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중에서 임명한다.
 ③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소장이 소속 기관의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문 3. 교정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화개선(rehabilitation)은 범죄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재소자들에게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이다.
 ② 선택적 무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는 범죄자의 특성에 기초하여 행해지고, 범죄자의 개선을 의도하지 않는 점에 특색이 있으며, 비슷한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비슷한 정도의 장기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응보주의(retribution)는 탈리오(Talio)법칙과 같이 피해자에게 가해진 해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다.
 ④ 억제(deterrence)는 처벌의 확실성, 엄중성, 신속성의 3가지 차원에서 결정되므로 재소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강조된다.

문 4. 「민영교도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의 처우향상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②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위탁업무에 관하여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직원의 임명권자에게 해임이나 정직, 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 등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을 임면할 때에는 미리 교정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아래의 경비처우급과 작업기준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개방처우급 ㄴ. 중(重)경비처우급
 ㄷ. 완화경비처우급 ㄹ. 일반경비처우급

- A.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
 B.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
 C.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작업 가능
 D. 필요시 구내작업 가능

- ① ㄱ - A ② ㄴ - C
 ③ ㄷ - D ④ ㄹ - B

문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② 소장은 미결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미결수용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미결수용자의 의사, 건강 및 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한 미결수용자를 체포한 경우 및 미결수용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기소된 상태인 경우에는 법원에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하며, 만약 미결수용자를 이송, 출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탑승한 호송 차량이 아닌 별도의 호송 차량에 탑승시켜야 한다.

문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 관리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폭력수용자는 변호표와 거실표의 색상을 노란색으로 한다.
- ② 엄중관리대상자는 조직폭력수용자, 마약류수용자, 그리고 관심대상수용자로 구분한다.
- ③ 소장은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수용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하여야 한다.
- ④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한다.

문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전자영상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접견실은 제외된다.
- ②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 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 ③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 계호대상 수용자가 여성이면 여성교도관이 계호하여야 한다.
- ④ 거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변을 보는 하반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거나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을 위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수용자가 도주 등을 하거나 도주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 체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면 도주 등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도주 등을 한 사람의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③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도주 후 72시간 이내에 체포할 수 있다.
- ④ 소장은 도주한 수용자를 체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체포하게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문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상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9일 이하의 금치, 1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및 공동행사참가 정지는 징벌실효기간이 1년으로 동일하다.
- ② 징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 3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③ 수용자가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한 때와 재난시 응급용무 보조에 공로가 있는 때에는 소장표창 및 가족만남의 날 행사참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된다.

④ 소장은 징벌집행을 받고 있거나 집행을 앞둔 수용자가 같은 행위로 형사 법률에 따른 처벌이 확정되어 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벌집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문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실 및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소장은 수용자가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때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 ②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수용자가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때에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
- ④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문 12. 「형법」상 가석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2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뇌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④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문 13. 전자감시 가택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지만, 민간업체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 ② 본인의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선고로 이루어진다.
- ③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성인과 소년을 구분하지 않는다.
- ④ 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폭력 중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문 14. 「교도관직무규칙」상 당직간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당직간부의 지휘 아래 교정직교도관으로 하여금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원점검을 매일 2회 이상 충분한 사이를 두고 하게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인원점검을 한 당직간부는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당직간부는 수용자의 작업 등 일과활동이 끝나면 교정직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가 일과활동을 한 작업장 등에서 인원 및 도구를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안과장에게 보고한 후 수용자를 거실로 들어가게 하여야 한다. 수용자가 거실로 들어가면 다시 인원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한 후 일과종료를 명한다.
- ③ 당직간부는 매월 1회 이상 교도관의 비상소집망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당직간부는 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을 여닫거나 여러 명의 수용자를 이동시키는 등 계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휴식 중인 교정직교도관 등을 특정 근무지에 임시로 증가시켜 배치하여야 한다.

문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②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사전조사에서 신원에 관한 사항의 조사는 수형자를 수용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고, 그 후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③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사전조사한 사항을 매월 분류처우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분류처우심사표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 분류처우심사표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④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문 16. 다음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크레취머(Kreftschmer)의 체격형 중 성범죄가 많은 유형은 세장형이다.
- ㄴ. 허쉬(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일탈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에 기능장애가 생기면 통제가 이완되고 일탈가능성이 발현되어 범죄가 발생한다고 한다.
- ㄷ. 비판범죄학은 낙인이론이 제기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나, 낙인이론과는 달리 범죄통계에 관한 공식통계의 신빙성을 문제 삼지 않고 암수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다.
- ㄹ. 코헨(Cohen)의 하위문화이론과 밀러(Miller)의 하층계급문화이론은 다 같이 하층문화의 성격을 중산층의 지배문화의 대한 반항문화라고 본다.
- ㅁ. 중화이론은 중화기술의 내용으로 규범의 부정, 피해(가해)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피해자에 대한 비난, 고도의 충성심에 대한 부정을 제시한다.
- ㅂ. 자기관념이론은 합법적 기회구조의 차단을 범죄원인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 자아관념에 의한 통제의 결여를 가장 중요한 범죄원인으로 본다.

- ① ㄱ, ㄷ, ㄹ, ㅁ
- ② ㄱ, ㄴ, ㄹ, ㅂ
- ③ ㄴ, ㄷ, ㄹ, ㅁ
- ④ ㄴ, ㄷ, ㅁ, ㅂ

문 17. 형사정책학에서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전주의가 범죄행위에 초점을 둔다면, 실증주의는 개별적 범죄인에 초점을 둔다.
- ② 고전주의가 계몽주의 사조의 영향을 받았다면, 실증주의는 자연과학 발전의 영향을 받았다.
- ③ 실증주의가 인간행동에 대해 결정론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고전주의는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편이다.
- ④ 고전주의는 행위자의 위험성을 형벌부과의 기초로 한다.

문 18.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낙인이론에 따르면 범죄자에 대한 국가개입의 축소와 비공식적인 사회 내 처우가 주된 형사정책의 방향으로 제시된다.
- ② 슈어(Schur)는 이차적 일탈로의 발전은 정형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적 반응에 대한 개인의 적응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③ 레머트(Lemert)는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크게 사회구성원에 의한 것과 사법기관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에 의한 것이 가장 권위 있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 ④ 베커(Becker)는 일탈자라는 낙인은 그 사람의 지위를 대변하는 주된 지위가 되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문 19. 허쉬(T.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의 요소와 설명을 옳게 짝지은 것은?

- ㄱ. 부자지간의 정, 친구 사이의 우정, 가족끼리의 사랑, 학교 선생님에 대한 존경 등 다른 사람과 맺는 감성과 관심을 의미한다.
- ㄴ. 미래를 위해 교육에 투자하고 저축하는 것처럼 관습적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과 에너지, 노력 등을 의미한다.
- ㄷ. 학교, 여가,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범죄행위의 유혹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ㄹ. 관습적인 규범의 내면화를 통하여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의 형태로 관습적인 도덕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 | | ㄱ | ㄴ | ㄷ | ㄹ |
|------|----|----|----|---|
| ① 애착 | 전념 | 참여 | 신념 | |
| ② 애착 | 전념 | 신념 | 참여 | |
| ③ 전념 | 애착 | 신념 | 참여 | |
| ④ 전념 | 참여 | 애착 | 신념 | |

형사소송법 (19)

문 1. 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이 검찰송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의 절차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후 시정 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검사는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그 서류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문 2.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 ②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
- ③ 공판절차를 갱신한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 ④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외국인도 진술거부권의 주체가 된다.

문 3.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교통사고 후 도주)에 해당하는 사건은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다.
- ㄴ.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잘못이라고 하여 파기하면서도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6조를 위반한 것이다.
- ㄷ. 형사소송법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로 하므로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종결된다.
- ㄹ. 토지관할의 기준 사이에는 우열이 없으므로 하나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개의 법원이 동시에 토지관할을 가질 수 있고, 검사는 그 중 어느 곳에서든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 ㅁ. 토지관할의 기준 중 하나인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 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한다.

- ① ㄴ, ㄷ, ㅁ ②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ㄹ, ㅁ

문 4.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내용의 검열 없이 금지물품 차단 등을 위해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접견당사자의 소송수행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다.
- ③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 접견이 불허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문 5.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고,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 이 모든 과정에 피의자나 변호인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하여 교부하는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 ④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222조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문 6.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상 영상녹화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조서가 자신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검사가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한 경우 이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영상녹화물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 봉인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봉인을 해체하고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영상 녹화물은 그 재생과 조사에 필요한 전자적 설비를 갖춘 법정 외의 장소에서는 이를 재생할 수 없다.

문 7. 체포 및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 ㄴ. 구속집행 당시 영장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영장을 제시받아 그 기재된 범죄사실을 숙지하고 있으며, 구속 중 이루어진 법정진술의 임의성 등을 다투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라면, 그 자백을 증거로 할 수 있다.
- ㄷ.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체포사유의 판단은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에 의하여야만 한다.
- ㄹ.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제1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에는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경우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문 8.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을 불문하고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 이외에는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나, 심문 없이 기각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는 없다.
- ④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변호인·청구인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할 수 없고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문 9.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 ②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 ③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④ 보석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문 10.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는 자가 압수 후에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행위의 소송법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외국산 물품을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 ②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③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압수물을 몰수재판에 의하지 않고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예외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 ④ 필요적 몰수대상물은 가환부할 수 없다. 따라서 범인이 간접점유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법상 필요적 몰수대상인 물건은 범죄와 무관한 소유자의 가환부 청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가환부에 응하여서는 안 된다.

문 11.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단지 “성명 불상”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일반영장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② 세무법인 사무실에서 ‘압수할 물건’으로 “A주식회사와 B주식회사의 경리·회계 관련 자료”라고 명시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A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회사인 공소외 C회사의 경리·회계 관련 자료까지 압수한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의 범위를 초과하는 위법한 압수절차에 해당한다.
- ③ 현행법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 ④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제208조에 규정된 체체포 또는 재구속 제한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문 12.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으나, 증인신문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 재심청구사건에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증거보전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③ 증거보전은 물론 증인신문의 청구를 받은 판사도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④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 13.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정신청의 신청권자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인데 고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 ②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법령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단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재소자 특칙은 준용되지 않는다.
- ③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물론 공소제기결정의 대상이 된 피의자도 불복할 수 없다. 또한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통상의 공판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권한을 행사하나 공소취소를 할 수는 없다.
- ④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문 14.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법원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그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법정최고형이 징역 5년인 구 부정수표단속범위범죄를 범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 그곳에서 다른 범죄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8년 이상 복역한 후 우리나라로 추방되어 위 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위 수감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 ③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 ④ 피고인이 A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도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A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문 15.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ㄴ.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ㄷ.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 ㄹ.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다면,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써 그 효력이 인정된다.
- ㅁ.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법원은 해당 공소장변경신청을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 하여야 한다.

- ① ㄱ(O) ㄴ(O) ㄷ(O) ㄹ(X) ㅁ(O)
- ② ㄱ(O) ㄴ(O) ㄷ(X) ㄹ(X) ㅁ(X)
- ③ ㄱ(O) ㄴ(X) ㄷ(O) ㄹ(X) ㅁ(X)
- ④ ㄱ(X) ㄴ(X) ㄷ(X) ㄹ(O) ㅁ(O)

문 16.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판공개 원칙은 검사의 공소제기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그 내용이나 공소제기 여부를 알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절차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결정서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관한 문서로서, 이를 공개하면 수사에 관한 직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므로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한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증거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 ④ 제1심에서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터잡아 공소장 부분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절차를 진행한 위법이 있는데도,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제1심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기하여 검사의 항소이유만을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문 17.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를 한 바도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라도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의 인정자료로는 허용된다.
- ②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 ③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법관의 기피사유인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형의 양정에 관한 절차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단계와 달리 취급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양형조건에 관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수집·조사할 수 있다.

문 18.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절차를 안내받고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더라도 제1심 법원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러한 제1심 법원의 소송절차상의 하자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항소사유로 삼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③ 배심원의 평결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야 하므로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이 배심원단을 구성한 후 공판절차를 진행한다.
- ④ 국민참여재판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문 19.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압수한 경우에는 그 압수 이전에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채취한 지문일지라도 그 지문의 증거능력은 없다.
- ②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증인이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몸싸움을 연상시키는 ‘악’ 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를 1~2분 들었다고 증언한 경우, 그 소리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면 그 녹음테이프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

문 20.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거동의를 없음을 전제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디지털 저장매체의 사용자 및 소유자, 로그기록 등 저장매체에 남은 흔적, 초안 문서의 존재, 작성자만의 암호 사용 여부, 전자서명의 유무 등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작성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 ③ 작성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하여 저장해 놓은 문서로서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의 원본이 아니라 그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파일이 작성된 경우, 새로 작성한 파일을 출력한 문서는 로그파일의 복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로그파일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문 21.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로 간주되어 증거조사를 완료한 경우에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하면 제1심에서 부여된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 ②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증거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문 22.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재전문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전문서류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②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의 원본이 아니라 그 복사본의 일부내용을 요약·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파일이 작성된 경우에 피고인이 증거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문서파일에 대해 진술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로그파일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외에 전문법칙에 따라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 ③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대한민국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수명자(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deposition)는 이를 「형사소송법」 제315조 소정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볼 수 없다.

문 23.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②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 ③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 ④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의 경우는 그 존재 자체 및 기재가 그러한 내용의 사무가 처리되었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므로, 피고인이 우연히 작성한 그 문서의 내용 중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문 24.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종국판결에 대한 상고없이 추징의 선고부분에 한하여 독립상고는 할 수 없다.
- ② 1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에서 일부의 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피고사건 전부에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된다.
- ③ 원심이 두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만에 대하여 불복상고 하였다면, 설령 위 두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유죄부분은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을 뿐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상고심으로서도 판단할 수 없다.

문 25. 상고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상 상고대상인 판결은 제2심판결이지만 제1심 판결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②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원심에서 제출하였던 변론요지서를 그대로 원용한 방식의 상고이유는 부적법하다.
- ③ 형사소송법상 항소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때에는 그러한 내용이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고심이 이를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④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호에 열거된 상고이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형 법 (25)

문 1.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 중 실질설은 거동범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반면에, 형식설은 결과범은 물론 거동범에 대하여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되는 반면,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되지 않는다.
- ③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의무를 모두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요소로 이해하는 견해에 따르면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지나치게 확대된다.
- ④ 하나의 행위가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도 있다.

문 2.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는 착오의 객체가 구성요건요소이기 때문에 법률의 착오가 될 수 없다.
- ②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
- ③ 공무원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를 인정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 ④ 고의범에서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나, 목적범에서 목적은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

문 3.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은 乙, 丙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乙, 丙에 대하여 상해고의로 식칼을 휘둘렀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싸움을 말리던 丁이 칼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 판례에 의하면 甲은 丁에 대한 상해기수의 죄책을 진다.
- ② 甲은 乙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丙의 자동차에 맞아 유리창이 깨진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중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
- ③ 甲은 심야에 잤어대는 乙의 개 丙을 죽이려고 총을 발사하였다. 그런데 조준에 실패하여 乙이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추상적 부합설에 의할 경우 甲은 丙에 대한 재물손괴기수와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 ④ 감감한 밤중에 자신의 장모를 처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문 4.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기록위작·변작)에서 정한 ‘위작’에 권한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②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였으므로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③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④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연초 잎, 담배 필터, 담뱃갑을 제공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그 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손님에게 담배를 판매함으로써 담배제조업 허가 및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제조하였거나 제조된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문 5.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실제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ㄴ. 결과적가중범은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형법」에는 결과적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ㄷ. 甲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 ㄹ. 「형법」상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야기한 기본범죄가 고의범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과실범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개념이다.
- ㅁ. 결과적가중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예견가능성은 행위자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6.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그 부분에 관한 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결국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②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집행관이 압류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집행을 방해하는 채무자를 배제하고 주거에 들어가기 위하여 채무자를 떠밀었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甲이 찜질방 내에 침대, 부항기 및 부항침 등을 갖추어 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픈 부위와 증상을 물어 본 다음 아픈 부위에 부항을 뜬 후 그 곳을 부항침으로 10회 정도 찌르고 다시 부항을 뜨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여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5,000원 또는 25,000원을 받은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례 1] 甲은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용기를 내기 위해 술을 마신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A를 살해하였다.
- [사례 2] 乙은 음주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하였음에도 자의로음주 후, 음주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사례 3] 丙은 자신이 저지른 살해 행위에 대한 재판 도중, 범행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 ① [사례 1]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를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살해 행위로 본다는 견해는 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 원칙을 고수한다는 장점이 있다.
- ② [사례 1]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를 원인행위시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③ [사례 2]는 [사례 1]과 달리 「형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다.
- ④ [사례 3]에서 전문감정인이 丙의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임을 인정하는 소견서를 제출하였다면, 법원은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어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문 8.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② 긴급피난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 ③ 자구행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권은 보전할 수 있는 권리임을 요하므로, 명예와 같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권리는 자구행위의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법익이 침해된 이후의 사후승낙도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다.

문 9. 예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개념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세트인쇄기를 사용하여 한국은행권 100원권을 사진찍어 그 필름 원판 7매와 이를 확대하여 현상한 인화지 7매를 만들었다면 통화위조의 착수에 이른 것이다.
- ③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단순한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 족하다.
- ④ 절도를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절도 범행이 발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을 휴대하고 있었다라도 강도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10. 甲은 乙의 애인 A를 자신의 애인 B로 오인하여 놀라게 할 생각으로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껴안았는데, 乙은 甲을 성폭행범으로 오인하고 甲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A를 B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는 부정되지 않으므로 甲은 A에 대한 강제추행의 죄책을 진다.
- ② 乙이 甲을 성폭행범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의도적으로 甲을 때려 상해를 입힌 이상,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乙은 상해의 죄책을 진다.
- ③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乙이 甲을 성폭행범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되나 책임이 부정되어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만약 甲이 추행의 의사로 A를 뒤에서 팔을 벌려 껴안으려 했다면 A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A를 껴안지 못하였더라도 甲은 A에 대한 강제추행 기수의 죄책을 진다.

문 11.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 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업무상배임죄에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지면 충분하고, 행위자가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
- ③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면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형법」 제331조 제2항에 정한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 12.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그 행위와 대항범 관계에 있는 ‘처방전을 교부 받은 행위’를 한 자가 의사에게 진찰 없는 처방전 교부를 교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에게 「형법」 총칙상 교사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 ③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자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 있다.
- ④ 「형법」상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문 13. 다음 중 판례가 긍정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
|---|
| ㄱ. 편면적 방조에 있어서 공범종속성
ㄴ. 예비단계에 있어서 방조범 성립
ㄷ.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성립
ㄹ.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
ㅁ. 강간치상죄의 동시범특례규정 적용 |
|---|

- ① ㄱ, ㄷ, ㄹ
- ② ㄱ, ㄷ,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문 14.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②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 ③ 의사가 의사 면허 없는 일반인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의사도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 ④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죄와는 별도로 상습도박방조의 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다.

문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저작권법은 상습으로 동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 한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회에 걸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것이 상습성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죄로 처단되는 상습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 ②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면,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별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
- ③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수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④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문 16.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폭행죄의 폭행이란 소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 ③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이므로 피해자가 폭행과 무관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④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문 17. 사기와 공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 ㄴ. 피해자 A는 드라이버를 구매하기 위해 특정 매장에 방문하였다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10분쯤 후 甲이 같은 매장에서 우산을 구매하고 계산을 마친 뒤, 지갑을 발견하여 습득한 매장 주인 B로부터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내 것이 맞다.”라고 대답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지고 간 경우, 甲에게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한다.
- ㄷ.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
- ㄹ.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문 18.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범죄 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한다.
- ② 포괄일죄의 중간에 다른 종류의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이고, 이를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룰 것은 아니다.
- ③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 ④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문 19.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말하는 ‘성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를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를 할 때 그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의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ㄴ.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의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 ㄷ.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ㄹ.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와 같이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사람은 낮은 정도의 유·무형력의 행사에 의해서도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죄의 성립요건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보다 완화된 형태로 규정한 것이다.

	ㄱ	ㄴ	ㄷ	ㄹ
①	O	X	O	O
②	O	X	O	X
③	O	O	X	O
④	X	O	X	X

문 20.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 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과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과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 ㄷ.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을 의미할 뿐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ㄹ.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연예인인 피해자를 ‘국민호텔녀’로 지칭하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21. 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 ② 연립주택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위층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의 밸브를 임의로 잠근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아 하루 동안 수도물이 나오지 않은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상수도관의 밸브를 확인하고 이를 열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면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甲이 교제하다 헤어진 A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A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A가 거주하는 101동으로 연결된 출입구의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들어가 A의 집 현관문 앞까지 출입한 경우, A와 같은 아파트 101동에 거주하는 다른 입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甲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④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관리자의 가정적·추정적 의사는 고려되어야 하며, 그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쳐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문 22.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채무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부동산 매도인인 피고인이 매수인 갑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 등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 을 등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또는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라도 채무자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23.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②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 ③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④ 허위공문서작성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므로 작성권한이 없는 기안담당 공무원 갑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한이 있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갑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문 24.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재와 다르다면 그 등기가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② 가장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③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비치하게 한 경우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④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의 소유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라면 그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의 채권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별도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2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
- ②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면 곧바로 성립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권유 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